

(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4.5~4.11)

1 경제일반

1. 日 환경성, 배출량거래제도 초안 제시

□ (배출량거래제도 초안 제시) 日 환경성은 4.2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에 상한을 마련하여 과다·부족분을 거래하는 배출량거래제도 초안을 제시함.

※ 현재 일본에서는 동 제도는 일본 전체가 아닌 도쿄도 및 사이타마현에 한정하여 시행중

○ 동 제도는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초안을 제시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脫탄소 대책에서 선행하는 기업으로부터 쿼터 취득이 가능

○ 제도 도입 초기에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쿼터 내에서는 대부분을 무상으로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유상의 배출 쿼터 비율을 높일 예정

□ (과제) 배출량 거래는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을 매기는 탄소세의 일종으로, 배출량 감축에는 효과적이거나 현재 기술로는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한 철강 업계 등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음.

○ 환경성은 탄소세 등 기타 제도도 포함하여 2021년 여름까지 중간 정리를 제시할 예정이며, 탄소세와 관련해서는 경제산업성도 별도 논의 진행 중

2. 자민당, 원전 신증설 등 추진 의원연맹* 출범 관련

* '탈탄소사회 실현과 국력 유지·향상을 위한 최신헌 원자력 재건축 추진 의련'

□ 원전을 중요 전원으로 자리매김할 자민당 의원연맹이 근시일 중 출범하는바, 日 정부가 이르면 올 여름 개정 예정인 에너지 기본계획*에 원전 신증설 및 기존시설 교체 추진을 명기토록 촉구해 나갈 방침임.

* 현행 계획(2018.7월 개정)은 2030년도 발전량 대비 원자력 비율을 약 20~22%로 설정했으나,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영향으로 현재 비율은 6%

○ 동 연맹은 원전에 대해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대량 발전(發電)이 가능한 실용화된 탈탄소 전원이며 기술 자급율도 높은 준(準)국산 에너지' 라고 강조하고, 2050년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양립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간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계속 활용 필요성을 제기

○ 설립 취의서에는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에 맞춰 CO₂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신증설 등을 '추진하는 방향성을 제시해 나갈 것' 이라고 명기하고, 차세대 원전 건설에 대해 '보다 안전·안심으로 이어질 것이며 정부는 책임을 갖고 추진해야 할 때' 라고 촉구

※ 단, 스가 총리는 그간 국회 답변 등에서 원전 신증설과 관련 '현시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고 언급해 옴.

□ 동 연맹은 4.12 1차 회의를 개최해 아마리 세제조사회장 및 누카가 총합에너지전략조사회장 등 중진이 주축이 되어 대정부 제언을 검토할 예정

3. 정년 연장 관련

1.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 시행

○ (개정법 시행) 70세 이상의 취업 기회 확보를 기업의 노력의무로 정한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이 4.1부터 시행됨.

- 저출산 고령화 진행에 따라 사회보장비용이 세출(歲出)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늘어난바, 日 정부는 동 제도를 통해 가능한 한 다수의 고령자들을 사회보장비용의 지원층으로 편입시키려는 의도

- 新 제도상에는 70세까지의 취업 기회 확보를 위해 기업이 ①고용 지속 ②

정년 연장 ③정년 폐지 ④프리랜서 계약으로의 이행 ⑤사회 공헌 활동에의 참여 지원 중 하나 이상을 제도화할 노력 의무를 부과

- **(과제)** 단, 新제도는 노력 의무 도입에 그친 만큼 기업측의 적극적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며 노사 양측에 과제가 산적한 만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환경 정비가 시급함.
- **(기업측 환경 미비)** 日 정부의 2020년판 ‘고령사회백서’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고령자 중 90% 이상이 70세 이상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변한 데 비해 후생노동성이 2020.6월 발표한 ‘고연령자 고용 상황’에 따르면 66세 이상의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춘 기업은 전체의 33.4%에 그침
- **(고용형태 우려)** 직원이 계속해서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기업 측은 인건비 급증 등을 막기 위해 정년 연장 및 폐지 등 대담한 조치가 아닌 비정규직 형태로 전환하여 고용을 계속하는 등의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고용형태는 임금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바, 기업측은 고령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필요

2. 日 국가공무원, 65세까지 정년 연장 추진

- 日 정부는 금번 국회에 국가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再제출*할 예정이다.
- * 日 정부는 2020년 통상 국회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비롯한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日 정부의 검찰 인사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이 반발, 2020년 정기국회에서 폐안(廢案)된 바 있음.
- 스가 日 총리는 4.5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개정안의) 조기 제출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차주 중 각의 결정할 예정으로, 금번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목표
- 국가공무원 일반직 정년을 2022.4월부터 2년에 1세씩 연장하여 2030년도에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계속 심의중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동시에 심의하여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맞추출 예정

2 대외경제 동향

4. 일미, 기후변화 파트너십 협정 체결 추진

- 일미 양국 정부는 4.16(금)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계기에 기후변화에 관한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할 방침으로, 양국 정상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 목표의 구체적 방향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
- 스가 총리는 4.4 후지TV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4.22 주최하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와 관련 ‘일미가 공동(논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회담으로 삼고자 한다’고 언급하고, 가지야마 경산대신 및 고이즈미 환경대신에게 구체 방안을 검토토록 지시한 사실을 표명
- 바이든 정권은 동 정상회의 개최 전 2030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며, 스가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에 관한 日 정부의 검토 상황을 바이든 대통령에 설명할 예정
- 일미 양국은 유럽 각국에 비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뒤처지고 석유 및 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반면 국제사회로부터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바, 수소 및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CCUS) 활용 등이 양국 협조의 골자가 될 전망이다.
- 또한, 미국은 기존 원자로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고 알려진 소형원전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어 일본은 협력을 요청할 계획
- 한편, 일본은 미국이 우려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지원 신규 안전을 전면 정지하기 위한 조율을 추진 중으로, 양국은 석탄화력 의존도가 높은 개도국이 재생에너지 등을 저렴하게 조달 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에 착수

5. 일미, 반도체 공급망 구축 협력 추진 동향

□ (정상회담 합의 도출 추진) 일미 양국 정부는 반도체 등 중요부품 안정 공급망 구축 협력에 관한 조율에 돌입한바, 4.16 예정된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함.

- 양국 정상은 분산형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대만, 미국과의 대립이 심화하는 중국 등 특정 지역에 생산거점이 편중되지 않는 체제를 검토할 전망
- 일본의 국가안전보장국과 경제산업성,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상무부 등 유관 부처는 연구개발 및 생산체제 등 역할 분담을 위한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기존 공급망이 안고 있는 리스크 분석에 선행 착수
- 일본은 반도체 제조장치 및 재료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어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거점을 일본에 설치토록 하는 등 협력을 검토 중이며, 미국은 일본에 對中 수출규제에 협력토록 요구할 가능성도 존재

□ (일미 연계 강화, 日 반도체 산업 복권(復權) 걸림돌 우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로직 반도체 등 최첨단 생산 분야에서는 뒤처지나, 이미지센서 등 특정 분야는 여전히 강점을 지니고 있고 소재 및 제조장치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기업도 다수임.

- 단, 반도체 소재 및 제조장치는 반도체 분야의 미세화 등 기술경쟁의 가속화 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진입장벽이 높아 향후도 일본 기업의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 정부 주도의 일미 연계 강화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복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상존
- 반도체는 제조업부터 IT 관련 산업까지 다양한 산업을 지탱할 뿐 아니라, 일본-미국-대만은 반도체를 對中 기술안보 관점에서도 바라보고 있는바, 단순 협력이 아닌 일본 반도체 산업의 재구축으로 이어질 구상력이 요구되는 상황

[참고] 日 유수 반도체 업체(2019년 기준)

	제품	기업(세계시장 점유율)
반도체	CMOS 센서	소니(53.5%)
	플래시메모리(NAND형)	키옥시아(19%)
소재	실리콘웨이퍼	신에쓰화학공업(1위), SUMCO(2위)
	포토리티스트(감광재)	JSR(1위), 도쿄오카공업(2위)
장치	코터·디벨로퍼(도포 현상 장치)	도쿄일렉트론(91%), SCREEN홀딩스(5%)
	세정장치	SCREEN홀딩스(44%), 도쿄일렉트론(30%)

6. 일미, 제3국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공급망 강화 등

1. 日·美 제3국 인프라 구축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 추진

- 일미 양국 정부는 제3국 인프라 구축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할 예정으로, 4.16 예정된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함.

※ 일미 정상회담 인프라 구축 관련 의제 : △ 인도태평양 국가 지원 확대, △투자 규범 관련 지침 작성, △ 5G 등 최첨단 통신기술 협력, △탈탄소 대응 지원, △中 '일대일로' 구상 대항(對抗)

- (경위) 일미 양국은 트럼프 前대통령 취임 당시 인프라 정비 협력에 관한 각서를 교환한 바 있으나, 양국은 그간의 안전별 협력 체제를 개선해 계획적 투자 확대에 나설 예정
- (내용) 지침에는 투자 요건이나 사업실시 체제, 현지 인재육성 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기술 유출 방지 관점에서 조달 기준 및 보수 관리 규정 등도 포함
- (목적) 양국은 사업 체제 및 조달 기준 등을 지침으로 마련해 질 높은 인프라 정비를 전개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 내 5G 통신망 및 에너지 시설 등 지원을 확충코자 하며, 이는 개도국 및 신흥국에 저가형 설비를 도입해 '일대일로' 구상을 확대하려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
- 동남아 및 인도태평양 도서 국가는 일미가 주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에 있어서도 연계가 불가결한 국가들로, 양국의 지원 조직 및 수주 기업이 동 지침을 전제로 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제3국의 신뢰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 해저 케이블 등 아시아 인프라 수요는 2016~30년 약 26조 달러(ADB 추산)

- 코로나19 감염확산 영향으로 관광이 주 수입원이던 아시아 및 태평양 도서 국가의 재정상황이 악화하며 AIIB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도 등장하는 가운데, 이들 국가가 중국의 원조를 받아 채권국으로터 외교 압박을 받는 ‘채무의 덩어리’에 빠질 것을 우려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3.31 인프라 투자 관련 연설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통해 미국의 혁신적 힘을 키울 것. 기후변화 대응을 진전시켜 클린 에너지 미래를 실현할 것’ 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2. 美 대변인, ‘일미 공급망 연계 강화’ 발언

- 일미 정상회담 관련,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4.5 기자회견에서 일미 반도체 공급망 강화 합의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미 동맹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 번영의 초석이며 공급망을 비롯한 폭 넓은 분야의 연계 심화를 추구한다’ 고 답변함.
- 同인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2021.3월 방일시에도 일측과 공급망을 포함한 협력 가능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
- 금번 일미 정상회담에서는 하이테크 패권을 둘러싼 중국과의 대립을 염두에 두고 분산형 공급망 구축 중요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며, 대만 등 특정 지역에 생산거점이 편중되지 않는 체제를 검토할 전망

7. IT기업 대상 공통 과세규범 구축 위한 다자 협상 필요

- (각국 독자적 과세 강화) 프랑스·스페인·인도 등 일부국가들은 美 IT 대기업 등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에 독자적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독자적 과세보다 국제적 공통 과세규범 구축을 위한 다자간 협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인도는 2016년 국외 IT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등의 매출에 대해 6%의 세금을 부과하는 독자적 과세를 도입했으며, 이후 2020년 同稅의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전자상거래에도 2% 과세를 도입했고 2021.4월 과세대상을 추가 확대

- 日 경단련 및 美 정보기술산업협회(ITI)등 일본·미국·유럽의 경제단체는 이러한 인도의 디지털 과세 확대를 우려, 2021.3월 중순 인도 정부의 과세 강화에 반대하는 서한을 공표

- (일본 내 상황) 이외에도 프랑스·스페인 등이 디지털 서비스를 대상으로 3%의 세금을 과세하는 등 유럽 각국은 미국과의 통상 대립을 각오하고 독자적 과세를 단행하고 있으나,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2021.3월 경제산업성이 전문가 스터디그룹을 구축하여 각국 동향을 분석하는 데 그침.

- 일본은 2019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의 의장국을 맡아 국제 협력을 촉구한 경위도 있는 만큼 우선 국제적 공통 과세규범 구축을 위한 협상 가속화에 전념할 공산

- 공통 과세규범은 최종적으로는 OECD가 정리한 후 약 140개국의 합의를 얻을 필요가 있으나, 우선은 2021.7월 개최예정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참가자의 합의 획득 여부가 초점

- 디지털 과세의 국제 규범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막기 위해 최저세율을 구축하고자 하는 안과 세트로 논의되고 있으며, 미국은 법인세율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美 엘런 재무장관은 지난 3.23 공청회에서도 법인세 인상에 강한 의욕을 나타낸 만큼 ‘아직 합의 여지는 있다(日 재무성 관계자)’ 는 평가

4 기타

8. 英 CVC, 도시바 인수 관련

1. 英 CVC, 도시바 인수권 제안

○ **(인수권 제안)** 도시바는 4.7 英 사모펀드인 ‘CVC 캐피털 파트너스’에서 2조엔 규모의 주식공개매수(TOB) 제안을 받아 이사회 측에서 검토에 들어감.

- 제안받은 매수액은 4.6기준 주가(3,820엔)대비 30% 정도 프리미엄을 얹은 금액으로, 이르면 차주 중 CVC가 정식으로 제안할 것으로 추정
- 도시바는 부정회계 문제 및 美 원전사업 관련 거액 손실 등으로 경영난에 빠진 이후 경영 재건을 위해 다수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대규모 증자를 받았으나, 이후 도시바 측과 펀드 간의 대립이 심화

* 다수 행동주의 펀드 : 주식 매수를 통해 특정 기업의 주요 주주로 등재된 후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에 따라 기업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성격의 펀드

○ **(도시바 상장폐지 제안)** 금번 제안에는 도시바 주식 공개 매입을 통한 상장폐지도 포함됨.

- 현 CEO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성장전략에 임할 목적으로, CVC의 상장폐지 제안을 받아들여 단기적으로 공개시장을 벗어나는 것도 전략적 합리성이 있는 선택일 수 있다는 관점도 존재하나, 그간 도시바의 경영진이 견지해 온 상장사의 방향성이 소실되는 데 대한 우려도 존재

2. 경제 안보상 우려

○ **(개정외환법 중점 심사대상)** 日 국내에서 2020년 시행된 개정외환법에 따르면 외국 투자자가 안보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기업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할 경우 사전 신고 및 국가의 심사가 필요하며, 도시바는 방위·원전·전력 등 사업 등을 보유한 만큼 同法 심사대상임.

- 同法은 개정 전에는 신고 기준의 출자 비율이 ‘10% 이상’이었으나 국경간 기업 인수권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계 자본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미국 각국과 보조를 맞추어 엄격화했으며, 도시바는 사전신고가 필요한 상장사 리스트에 존재

- 가토 관방장관은 4.7 기자회견에서 ‘해외 투자자가 중요 인프라 관련 사업 등을 실시하는 일본 기업을 인수할 때는 외환법에 근거한 절차가 필요하

다’고 하며 ‘일본의 경제·사회상 중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경영체제가 구축·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안보와 관련된 사업을 지속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

- 일본상공회의소 미무라 아키오 회두는 4.7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안보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제대로 대비된 상황인지 우려된다’고 언급했으며, ‘전세계에 투자 머니가 남아도는 상황으로, 해외에서 日 기업을 인수하기 쉬운 환경인바 조심해야 한다’고 경종을 울림
- 매입에는 거액 자금이 필요한 만큼 CVC가 기타 해외 투자펀드와 공동으로 매입할 가능성도 부상하는바,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신중하게 인수 여부를 심사할 필요 (산케이)

○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는 美中 무역대립 등에 따라 경제안보상 중요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하나, 도시바는 메모리 반도체 대기업 키옥시아홀딩스(舊 도시바 메모리 홀딩스)의 주식 중 40%를 보유(의결권 기준)하고 있는 점도 금번 인수권의 주요 쟁점임.

- 키옥시아홀딩스는 美 투자펀드인 베인캐피탈 등이 약 50%의 주식을 보유한 만큼 도시바가 CVC 그룹사가 될 경우 키옥시아홀딩스 의결권의 90%를 외국계 기업이 보유
- 자민당 시모무라 히로후미 정조회장은 4.7 기자회견을 통해 ‘(CVC가 도시바의) 경영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일본 정부로서 간과할 수 없다’며 ‘향후 (도시바측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에 따라 정부측 대응이 정해질 것’이라 언급
- 경제산업성 내에서는 MBO*형태로 안정적 경영을 도모할 경우 반드시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평가도 존재하며, 경산성 고위 관계자는 4.7 ‘외국계 기업이 인수한다고 해서 꼭 좋다거나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고 언급

* MBO(Management by Objectives) : 회사 내 경영진·임직원이 기업 또는 일부 사업부를 인수하는 형태